

비상경제장관회의

23-25-1

(공개)

맞춤형 애로 해소를 통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

2023. 11. 8.

관계부처 합동

순 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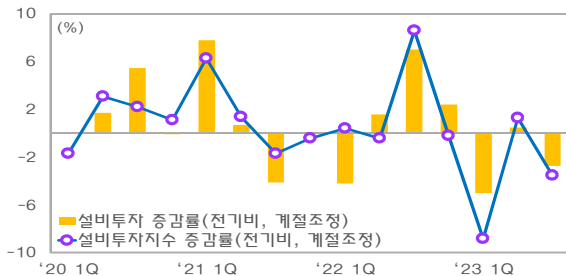
I. 추진 배경	1
II. 추진 방향	2
III. 애로 유형별 맞춤형 지원 방안	3
1. 투자 관련 규제 및 여건 개선	6
① 울산 대규모 석유화학시설 건설	6
② 충청 이차전지 생산공장 구축	7
③ 연구개발특구 개발	8
④ 전남 해상풍력 발전사업	9
⑤ 영천 경마공원 건립	11
⑥ 부산 에코델타시티 내 생산시설 건립	12
2. 행정절차 Fast-Track 추진	13
① 하남 K-POP 공연장(The Sphere) 설립	13
②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	15
③ 부산 세계적 미술관 분관 건립	16
④ 대구·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	17
⑤ 경인 해상풍력 발전사업	18
3. 사업분쟁의 조정·중재	19
① 고양 K-컬처밸리 조성	20
② 고양 관광문화단지 내 관광숙박시설 건설	21
③ 인천 검단신도시 역세권 개발	22
④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	23
⑤ 덕산 일반 산업단지 조성	24
⑥ 수색 역세권 DMC 개발	25
⑦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 조성	26
IV. 과제별 향후 추진계획	27

I. 추진 배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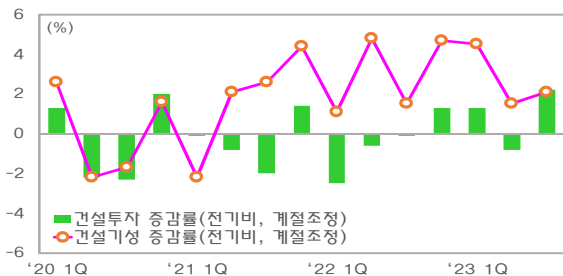
□ (투자 동향) 고금리 장기화, 대외 불확실성 등 투자 제약 요인 산재

- (설비투자) 그간 고금리 장기화, 글로벌 반도체 업황 및 세계 교역 부진 등 대외 불확실성 등으로 다소 부진
 - 반도체 등 수출이 호전되면서 설비투자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, 고금리로 인한 자금조달 애로* 등 불확실성은 여전
 - * 대출태도지수(대기업): '23.1Q 6 2Q 3 3Q 3 4Q 0 / 대출수요지수(대기업): '23.1Q 3 2Q 17 3Q 17 4Q 14
- (건설투자) '20~'22년 중 건설 수주 호조 등으로 다소 양호한 흐름
 - 다만, 최근 건설공사비 급등* 등으로 투자여건 악화
 - * 건설공사비지수('15년 100): ('16)101.9 ('17)107.1 ('18)112.0 ('19)116.5 ('20)1189 ('21)1323 ('22)1465 ('23.9월)1536
 - 금년 건설 수주 절벽*에 따른 영향, 대내외 여건 불확실성 등으로 향후 투자 위축 우려
 - * 건설 수주 증감률(전년비, %): ('20)16.9 ('21)9.2 ('22)10.1 ('23.1Q)△11.1 (2Q)△31.5 (3Q)△48.4

< 설비투자 >



< 건설투자 >



□ (투자 활성화) 조속한 경기 반등,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민간투자 활성화 긴요 →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점검 및 지원 방안 마련·추진

- (잠재 투자) 금융·세제·재정 지원 등 잠재 민간투자 유인 제고 필요
 - 약 50조원 설비투자 자금지원,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확대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, 외투·유턴 보조금 확대 등 지원 중
- (旣계획 투자) 이와 함께, 규제·절차·분쟁 등으로 보류되거나 차질이 예상되는 기업 투자 프로젝트의 정상 가동 지원 필요
 - (👉 이번 대책의 중점 추진 분야)
 - 애로 해소를 통해 신속한 투자 집행 성과 도출 가능

II. 추진 방향

□ (추진 방향) 기업이 계획한 투자 프로젝트의 신속한 가동 지원

- ➔ ①지체·보류되고 있는 투자는 조속히 재개되도록 하고,
- ②계획된 투자는 당초 일정대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지원

○ 투자 프로젝트의 애로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·추진

-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관련 지자체·경제단체·업종별 협회 등 건의를 검토한 결과, 크게 3가지 형태의 애로*를 제기

* ①투자 관련 규제 및 여건 개선, ②행정절차 Fast-Track 추진, ③사업분쟁 조정·중재 등

- 시급하고 투자 파급효과가 큰 18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애로 해소 추진 + 그 외 투자 건도 지원 방안 지속 검토

<애로 유형별 맞춤형 지원>

① 투자 관련 규제 및 여건 개선	② 인·허가 등 행정절차 Fast-Track 추진	③ 사업분쟁 조정·중재
⇒ 산업단지 입지, 환경 규제 등 관련 제도 개선 + 지역 관광 개발 등 투자기반·여건 개선	⇒ 특구·산단 개발계획,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 면제·단축 등 추진	⇒ 조정위원회 본격 가동(9월~)으로 발주처(官)·사업자(民) 간 갈등·분쟁 조정·중재 ※ 조정위 조정신청 34건 접수: (1차)15건 (2차)19건 조정 추진

□ (추진 체계) 「범부처 지역 투자 지원 TF」 등을 통해 밀착 지원

○ 「범부처 지역 투자 지원 TF」(팀장: 기재부·국토부 1차관, '23.9월 출범)를 통해 개별 투자 프로젝트를 원스톱으로 밀착 지원

- 투자 프로젝트별 지원 방안을 과제카드화하고 실제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 + 필요시 보완방안 강구

○ 비상경제장관회의 등 보고 통해 추진상황·성과 등을 적극 공유

Ⅲ. 애로 유형별 맞춤형 지원방안

◇ 애로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의 정상 가동 지원 (18개 프로젝트, 최대 약 46조원 투자 규모)

- 지체되고 있는 투자의 조속한 재개 및 계획된 투자의 차질 없는 이행 지원

〈 맞춤형 지원방안 주요내용(요약) 〉

1 투자관련 규제 및 여건 개선

① 울산 대규모 석유화학시설 건설 약 9.3조원, '22 ~ '26년, 울산

▶ 기자재 적재공간 등을 위해 **산단 내 인근 부지 임대 허용** 추진

* '24년말 본격적 플랜트 구축 시작 후 일평균 11,000명 건설근로자 투입 전망

② 충청 이차전지 생산공장 구축 약 2.1조원, '23 ~ '25년, 충북 오창, 충남 서산

▶ 이차전지 산업 특성을 반영해 **별도 위험물 관리기준*** 신설

* 벽·지붕 등 주요 구조부, 유리종류, 바닥경사, 공조설비 및 배관재질 등 규제 완화

③ 연구개발특구 개발 약 0.8조원, (대구)'19 ~ '28년, (대전)'27 ~ '30년

▶ 특구개발계획의 **경미한 변경 승인 권한 위임**(과기정통부장관→시도지사)

④ 전남 해상풍력 발전 (단지조성)약 9.2조원, '18 ~ '30년, 전남 영광·신안·완도 (송변전설비 구축)약 1조원, '22 ~ '28년, 전남 신안

▶ (단지조성)일정요건 충족시 **지방공기업의 타법인 출자한도 확대**(現자본금 10% → 改25%)

* ①구체적 사업계획 수립, ②지방의회 의결 등, ③부채비율 100% 미만 동시 충족

▶ (송변전설비 구축)**습지보호지역을 횡단하는 송변전설비**(해상풍력단지-내륙) 구축 허용* 검토

* 現해저로만 설치 가능 → 改일정기준 충족시 횡단 철탑 설치도 허용

⑤ 영천 경마공원 건립 약 0.3조원, '22 ~ '26년, 경북 영천

▶ **인구감소지역 역점사업**에 대해 **지방세 감면액 총량 추가 인정** 추진

⑥ 부산 에코델타시티 내 생산시설 건립 약 0.2조원, '23 ~ '25년, 부산 강서

▶ **향온·향습 유지가 중요한 반도체 등 분야**에 대해 **사용 의무화된 지역냉방** **하** **별도 냉방시설 활용 허용**(연내)

2
행정절차
Fast-Track
추진

- ① **하남 K-POP 공연장(The Sphere) 설립** 약 2조원, '25 ~ '29년, 경기 하남
 - ▶ 관련 **행정절차* 패키지 Fast-Track** 추진(42개월 이상 → 21개월)
 - *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(10→4개월), 개발제한구역 해제(12→8개월) 등
 - ※ 최첨단 공연장 '스피어' 하남시 유치 MOA 체결 예정(S社-하남시, 12월)
- ② **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** 약 3.7조원, '24 ~, 경북 포항
 - ▶ **이차전지 기업 입주 허용**을 위한 **교통·환경영향평가**, **산단계획변경** 등에 대해 **'사전컨설팅+우선 심사'**로 **기간 단축**
- ③ **부산 세계적 미술관 분관 건립** 약 0.2조원, '24 ~ '29년, 부산
 - ▶ 지방재정법상 **재정투자심사 면제** → '24.3월까지 관련 절차 마무리
- ④ **대구·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** 약 2.6조원, '23 ~ '30년, 대구 군위
 - ▶ **활주로·접근도로·터미널·주차장 등 예타 면제**
 - ▶ **고속도로·철도 구축 등 관련 사업을 국가 상위계획에 반영 추진**
- ⑤ **경인 해상풍력 발전사업** 약 5.6조원, '23년 ~ '30년, 인천 옹진
 - ▶ **해상안전계획 수립을 전제로 풍황계측기 설치허가 신속 발급 지원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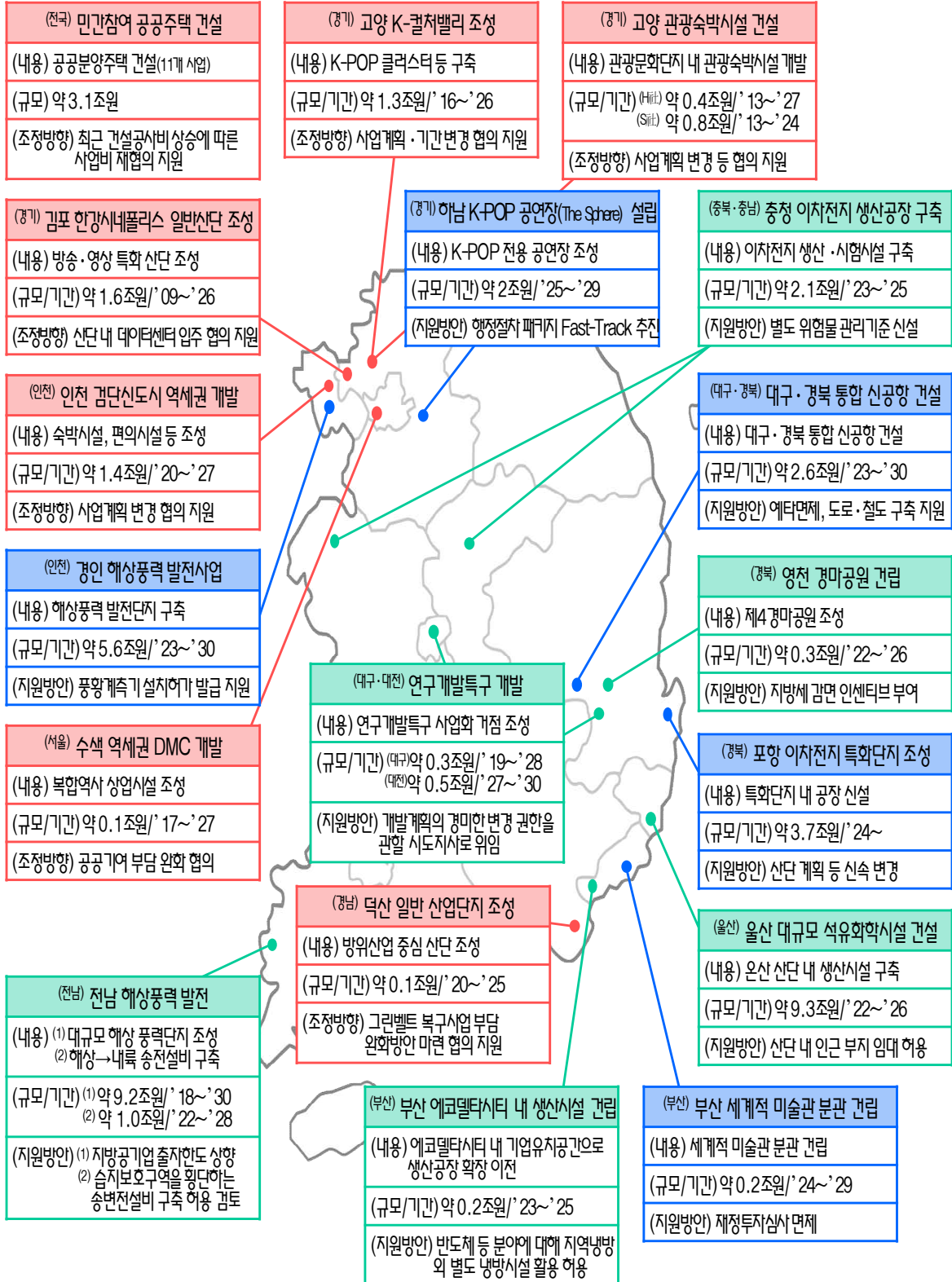
3
사업분쟁
조정·중재

- ① **고양 K-컬처밸리 조성** 약 1.3조원, '16 ~ '26년, 경기 고양
 - ▶ **상황변화에 따른 사업계획·기간 변경 등 협의 지원**
 - * 당사자간 합의를 '26년 아레나(공연장) 시설 완공을 목표로 조속히 공사 재개
- ② **고양 관광숙박시설 건설** 약 1.2조원, '13 ~ '27년, 경기 고양
 - ▶ **착공지연위약금 부담 완화** 및 일부 **사업계획 변경** 협의 지원
- ③ **인천 검단신도시 역세권 개발** 약 1.4조원, '20 ~ '27년, 인천 검단
 - ▶ 사업시행자의 **공공기여 확대** 방안을 포함한 **사업계획 변경** 협의 지원
- ④ **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** 약 3.1조원, 발주처가 LH인 11개 사업 통합
 - ▶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**사업비 조정 협의체 구성·협의** 지원
 - * 「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」에 사업비 재협의 제도 마련('23.3월) 했으나, 사례 無
- ⑤ **덕산 일반 산업단지 조성** 약 0.1조원, '20 ~ '25년, 경남 창원
 - ▶ **그린벨트 활용에 따른 복구사업 부담 경감** 방안 협의 지원
- ⑥ **수색 역세권 DMC 개발** 약 0.1조원, '17 ~ '27년, 서울 은평
 - ▶ **공공기여에 대한 부담 산정 협의안 마련·협의** 지원
- ⑦ **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 조성** 약 1.6조원, '09 ~ '26년, 경기 김포
 - ▶ **방송·영상 특화단지 내 데이터센터 설립 허용** 방안 협의 지원

[붙임]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지도

◇ **애로 유형별 맞춤형 지원**을 통해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의 정상 가동 지원
(18개 프로젝트, 최대 약 46조원 투자 규모)

※ 애로 유형 : ❶ 투자 관련 규제 및 여건 개선, ❷ 행정절차 Fast-Track 추진, ❸ 사업분쟁 조정·중재



1

투자 관련 규제 및 여건 개선

◇ 산업단지 입지, 환경 규제 등 관련 제도 개선 + 지역 관광 개발 등 개별 사업의 투자기반·여건 개선

① (울산 대규모 석유화학시설 건설) 산단 내 기자재 야적장 등의 부지 확보 지원

- ▶ (사업내용) 석유화학 원료, 고부가가치 석유화학제품 등을 생산하는 대규모 석유화학 생산시설
- ▶ (투자기간) '22 ~ '26년
- ▶ (투자규모) 약 9.3조원

○ (현황) '22.11월 사우디의 국내 투자 계기로 울산 온산국가 산업단지 내 대규모·최첨단 석유화학시설을 건설 추진 중

- 그러나, 해당 기업은 산단 부지 내 '24년말 본격적인 플랜트 구축에 필요한 야적장 및 주차장 설치 공간 확보*에 애로

* 기자재 적재를 위한 야적장 및 일평균 11,000여명 근로자를 위한 주차장

- 인근 미활용 부지가 있으나, 산업집적법에 따라 임대 불가능*

* 산업용지는 투기방지를 위해 실사용(건축 및 시설을 완비해 공장등록 등) 후 임대가 가능하나 인근 부지는 공장이 미착공된 상태로 임대가 불가능

○ (추진방안) 연내 부지 확보 애로 해소방안을 마련·확정하여 생산시설 투자기간 내 부지 임대('24.下 예정) 추진

- (1안) 산단 내 대체부지(즉시 임대 가능한 여유부지)를 탐색·협의 후 임대

- (2안) 1안 불가시(대체부지 활용이 어려울 경우) 산업집적법 개정('24.上)을 통해 인근 미활용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추진

○ (기대효과) '26년(준공 예정)까지 약 9.3조원 투자 효과 및 최첨단 석유화학 생산시설 구축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 등 기대

② (충청 이차전지 생산공장 구축) 산업특성을 고려한 별도 위험물 관리기준 신설

< L社 오창에너지플랜트 2공장 >

- ▶ (사업내용) 이차전지 신규 마더라인 파우치 올셀 배터리 시범생산라인 및 양산검증시설 구축
- ▶ (투자기간) '23 ~ '24년 ▶ (투자 규모) 6,000억원 ▶ (투자지역) 오창 2산업단지

< S社 서산 제3공장 >

- ▶ (사업내용) 이차전지 생산 스마트팩토리 구축
- ▶ (투자기간) '23 ~ '25년 ▶ (투자 규모) 1.5조원 ▶ (투자지역) 충남 서산 오토밸리

○ (현황) 전기차 수요 증대 등에 대응해 다수 기업이 이차전지 생산시설 설립을 추진 중

- 그러나, 위험물을 일부 장소에서 소량으로 취급하더라도 공장 건물 전체에 대해 일률적으로 규제*가 적용되어 공사 기간 연장, 투자 비용 증가 등 애로 발생

* 위험물 제조소의 엄격한 구조·설비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(위험물안전관리법)

- 현재 열처리 작업 등 12개 공정*의 경우, 위험물 일반취급소와 제조소를 구분하고, 일반취급소에 대해서는 보다 완화된 구조·설비 기준을 적용하는 특례규정이 존재하나,

* 세정 작업, 열처리 작업, 유압장치 설치, 절삭장치 설치, 화학 실험 등

- 이차전지 생산 공정에 대해서는 이러한 특례규정이 부재

○ (추진방안) 이차전지 제조공정 특수성을 감안하여, 일반취급소에 대한 별도 특례규정* 신설(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, '23.12월 개정)

* 벽지붕 등 주요 구조부, 유리종류, 바닥경사, 공조설비 및 배관재질 등 규제 완화

○ (기대효과) 향후 3년간('23~'25년) 약 2.1조원 투자 효과('23.6월 착공)

- 위험물 취급 관련 소방 인허가 기간 단축(3~6개월),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이차전지 기업들의 원활한 생산시설 투자 기대

3 [연구개발특구 개발] 경미한 개발사업 변경 승인권한을 시·도지사로 위임

〈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식서비스R&D 2지구(경산상림 재활산업특화단지) 조성사업 〉

- ▶ (사업내용) 재활의료 분야 산·학·연 연계 R&D 시설 및 산업시설, 주거시설 등이 포함된 재활산업 특화단지 조성
- ▶ (투자기간) '19 ~ '28년 ▶ (투자 규모) 2,637억원
- ▶ (사업주체) 경상북도개발공사(100%)

〈 대덕연구개발특구 탐립·전민지구 개발사업 〉

- ▶ (사업내용) 첨단부품,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 분야 기업을 유치하여 혁신클러스터 조성
- ▶ (투자기간) '27 ~ '30년(잠정) ▶ (투자 규모) 5,079억원
- ▶ (사업주체) 대전도시공사(100%)

○ (현황) 지자체(대구, 대전 등)는 R&D 성과 확산, 사업화 촉진 등을 위해 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 추진 중

- 다만, 경미한 특구개발계획 변경*의 경우에도 개발계획 수립권자인 과기정통부 장관 승인을 요하는 등 관련 절차 지연으로 개발사업 정상추진 차질 우려

* 특구개발사업 면적의 10% 또는 3만㎡ 미만, 수용예정 인구수의 10% 미만 변경 등

○ (추진방안) 특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특구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승인 권한을 관할 시·도지사로 위임 (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, ~'24.上)

- 또한, 특구개발계획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사후보고 등 절차 마련, 경미한 변경 범위 명확화 등 병행 추진
- 한편, 시행령 개정 이전의 경우에는 특구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과기정통부 장관의 신속한 승인 추진

○ (기대효과) 대구연구개발특구 등 전국 연구개발특구(19개) 개발 사업이 지역여건을 감안해 보다 활성화되고 신속하게 추진 가능

- 특히, 대덕연구개발특구('05년 특구지정)는 장기 미개발 지역에 대한 특구개발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

4 전남 해상풍력 발전사업

[① (단지조성) 일정요건 충족시 지방공기업 출자한도 확대]

구분	합계	영광 안마 해상풍력	완도 장보고 해상풍력	신안 임자 해상풍력 (신안 1단계 해상풍력 발전사업 중 일부)
발전용량(MW)	1,332	532	400	400
투자규모(조원)	9.2	4.0	2.6	2.6
사업주체	-	안마해상풍력 SPC (전남개발공사, 한국수력원자력, 현대엔지니어링 국풍력산업, 에퀴스)	코오롱글로벌, 전남개발공사, 한국서부발전	전남개발공사, 한국남부발전, 한국전력기술
추진경과	-	▶ 풍향계측기 설치('19) ▶ 발전사업허가('20) ▶ 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 심사 중('23.9)	▶ 풍향계측기 설치('19) ▶ 발전사업 허가('21) ▶ 송전설비 이용계약 진행 중('23.9)	▶ 풍향계측기 설치('20) ▶ 풍향계측 진행중 ('23.9) ▶ 해양입지컨설팅 심사 중('23.10)
예상 완공시기	-	'27	'30	'30

- **(현황)** 전남 해상풍력사업이 본격화될 예정이나, 지방공기업의 **他법인 출자한도 제한***으로 전남개발공사의 참여 제한

* 「지방공기업법」상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 한도 : 공사 자본금의 10%

※ 제주의 경우 풍력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지방공기업의 출자한도를 25%까지 인정(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)

- **(추진방안)**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등을 위해 **일정요건*** 충족시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한도를 자본금의 10→25%로 확대 (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 (관련 규정 신설, '24.上))

* ①구체적 사업계획 수립, ②지방의회 의결 등, ③부채비율 100% 미만 동시 충족

- **(기대효과)** 해상풍력사업에 지방공기업 참여 확대를 통해 '30년까지 약 9.2조원 투자 정상 이행 지원

[② (송변전설비 구축) 습지보호지역에 횡단 철탑 구축 허용]

- ▶ (사업내용) 신안 1단계 해상풍력 발전사업 송전설비 구축
- ▶ (투자기간) '22 ~ '28년 ▶ (투자규모) 약 1조원(관련 신안 1단계 해상풍력 발전사업 투자규모는 18조원)
- ▶ (해상풍력 사업자) 전남개발공사, 한전, 남동발전 등

○ (현황) 신안 1단계 해상풍력단지 가동('30~)에 맞춰 내륙 송전을 위해 신안 갯벌 습지보호지역을 횡단하는 송변전설비 구축* 추진 중

* 신안~신장성 345kV 공동접속설비 87km('30 계통연계 예정) 중 습지는 약 3.8km 구간

- 그러나, 현행 법령(습지보전법)상 습지보호지역에는 해저송전선로 등만 설치가 가능하고 횡단 철탑은 설치 불가

- 이에 따라 비용 가중 및 해상풍력 발전단지 가동 시점에 맞춰 생산전력의 내륙 계통 연계가 곤란

* 횡단 철탑이 해저 송전선로에 비해 공사기간이 짧고 비용 적게 소요

○ (추진방안)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,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횡단 철탑도 연안 습지보호지역 내 설치 허용 검토

- 관련 유사사례, 일정 면적·거리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용역('24)을 토대로 「습지보전법 시행령」 개정 등 추진

○ (기대효과) 내륙 송전망 구축 투자(약 1조원)와 함께 신안 1단계 해상풍력 발전사업(투자효과 약 18조원*)의 차질 없는 이행을 지원해 생산전력의 적기 활용 가능

* 전남개발공사가 투자하는 신안-임자 해상풍력 조성 사업(투자 규모: 2.6조원) 포함

5 (영천 경마공원 건립) 인구감소지역 역점사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 부여

- ▶ (사업내용) 서울·부산경남·제주에 이은 제4경마공원 조성(총 44만평 규모)
- ▶ (투자기간) '22.9월 ~ '26년 ▶ (사업주체) 한국마사회
- ▶ (투자 규모) 3,057억원 * 1단계(경마시설) 1,857억원, 2단계(공원시설) 1,200억원

○ (현황) 한국마사회의 제4경마공원 설치지역으로 경북 영천시 최종 선정('09.12월), 1단계(경마시설) 건설공사 진행 중('22.9월~)

- 경상북도는 선정심사 당시 경마공원 유치 조건으로 마사회의 경마공원 수익에서 징수하는 레저세의 감면(50%, 개장후 30년간) 제시

- 그러나,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규모 총량 제한*으로 향후 경마장 운영 시 레저세 감면 효과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

* 지자체별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지자체별 감면비율을 곱하여 산정

- 이로 인해 당초 예상 대비 경마경기 수 제한*, 사업성 약화가 우려되어 2단계(공원시설) 투자 의사결정이 지연

* 영천의 경우 약 400경기 가능 추산(서울 1,052경기, 부산경남 710경기, 제주 693경기)

○ (추진방안) 취약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천경마공원 건립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 부여

- 영천 등 인구감소지역의 역점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지자체별 지방세 감면액 총량에 더해 추가 인정* 추진

* 「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」(행안부 고시) 개정 :

(現)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, 여수세계박람회의 사후 활용을 위한 지방세 감면

→ (改) '인구감소지역의 활력증진을 위하여 행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가

○ (기대효과) '26년까지 마사회의 경마·공원시설 투자(3,057억원) 정상 추진, 랜드마크 건설로 약 1.8조원의 경제 파급효과 기대

6 (부산 에코델타시티 내 생산시설 건립) 생산공정 특수성 감안, 개별냉방시설 설치 허가

- ▶ (사업내용) 부산 소재 기업이 분산된 생산라인을 통합하고 생산용량을 확대하기 위해 부산 에코델타시티 내 기업유치전용공간으로 공장 확장 이전
- ▶ (투자기간) '23.11 ~ '25.10월 ▶ (투자 규모) 2,002억원(토지 752, 설비1,250)

○ (현황) L社는 해당지역에서 반도체 검사용 제품의 생산시설 투자를 추진 중

- 해당 생산시설의 일부 생산공정은 **항온·항습 유지**를 위해 **전기 구동 방식의 개별냉방시설**(항온항습기) 설치 필요

- 그러나, 공장 예정부지가 **집단에너지 의무공급 지역*** 내에 위치하여 원칙적으로 **지역냉방 외** 별도 에너지를 활용하는 **개별냉방시설 설치 불가**하여 **설비투자가 지연**될 우려

*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을 목적으로 일정 지역을 집단에너지 의무공급 지역으로 지정(산업부)
→ 해당 지역 거주민은 열병합발전소 등에서 생산된 집단에너지를 지역 냉·난방 등을 통해 일괄적으로 공급받아 사용

○ (추진방안) 同 기업 생산공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**항온·항습 유지**가 필요한 생산공정에 한해 **현장실사** 등을 거쳐 **전기 구동 방식의 개별냉방시설 설치 허가***(연내)

※ 집단에너지 의무공급 지역 내 개별냉방시설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(「집단에너지사업법」)의 적용을 통해 허가 발급 추진

○ (기대효과) **향후 2년간 약 2,000억원 투자** 효과 기대(연내 착공)

- 하남시·행안부의 협조를 통해 ①지방공기업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평가*시 **선순위 검토대상**으로 선정하여, **약 6개월의 기간 단축 추진**(행안부)

*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한 수요 및 수익성 평가 (「지방공기업법」 제65조의3)

- ②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**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**를 신속히 추진(국토부, 약 12개월 → 8개월)

- 한편, ③도시개발구역지정의 기간 단축(약 10개월 → 3개월)을 위해 ②개발제한구역 해제와의 **중복 절차 동시 진행*** 등 적극 지원

* 그린벨트 해제 및 도시개발구역지정 추진시 주민의견 청취, 관계기관 협의 등 중복절차의 동시진행(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·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4-4-3)

- **(기대효과)** '29년까지 **약 2조원 투자 효과** 및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**대규모 외국인 투자 유치 성공 사례** 창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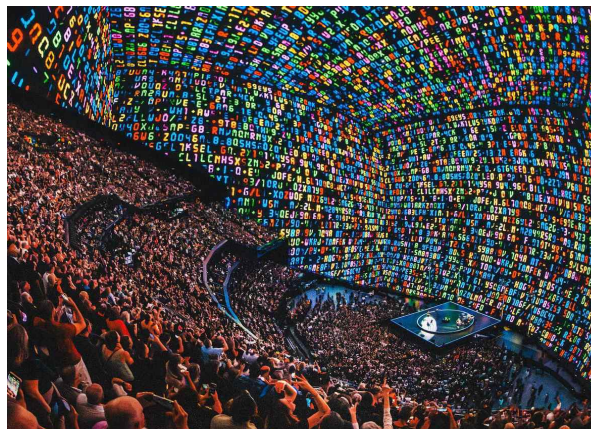
- 콘서트, 스포츠경기 등 개최가 가능한 최첨단 기술을 갖춘 **글로벌 랜드마크 공연장**을 아시아 최초로 유치

【 S社の 라스베이거스 소재 'The Sphere' 모습 】

공연장 외부 전경



공연장 내부



4 (대구·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) 신속 추진을 위해 예타면제 등 추진

▶ (사업내용) 대구·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

* 부지조성 5,187억원, 에어사이드(활주로, 계류장) 2,617억원,
랜드사이드(터미널, 주차장) 14,025억원, 접근도로 3,939억원

▶ (투자기간) '23 ~ '30년

▶ (투자 규모) 약 25,768억원

○ (현황) 국가균형발전 사업으로 대구·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추진 중*

* 「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 제정·시행('23.4 공포, '23.8월 시행)

- 당초 계획대로 '30년 준공 및 개항을 위해서는 '26년 상반기까지
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할 필요

○ (추진방안)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신속한 통합 신공항 건설 추진

- ① 활주로, 계류장, 터미널, 접근도로 등 예타 면제

(10.31일,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·의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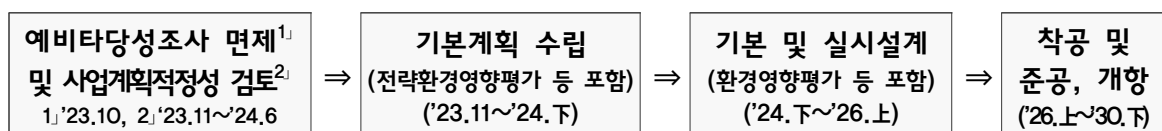
- ② 고속도로·철도 등 신규 연계 간선망은 사업 타당성 검토 후
국가 상위계획에 반영¹⁾하고, 既반영된 간선망²⁾은 신속히 추진

1) 국지도 68호선 확장(2→4차로) : 국도·국지도 건설계획 수립과정에서 검토('25)

2) 중앙고속도로확장(읍내IC ~ 군위IC), 고속도로 신설(경부선 북구미IC~중앙선 군위 IC,
대구~경북 광역철도(서대구~의성)

- ③ 환경관련 협의*(환경부), 신공항 발전 및 운영계획 수립 등
관계기관 협의 신속 추진(~'26.上 완료 목표)

* 기본계획 단계 : 전략환경영향평가 / 설계 단계 : 환경영향평가



○ (기대효과) '30년까지 2.6조원 투자 효과, '60년 여객 1,226만명
(국제 906만명, 국내 320만명), 화물 21.8만톤 운송 지원

3

사업분쟁의 조정·중재

◇ 조정위원회 본격 가동(9월~)으로 발주처(官)·사업자(民) 간 갈등·분쟁의 조정·중재

- * 「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」에 34건 조정 접수: (1차)15건 (2차)19건 조정 추진
- ※ 同 프로젝트들의 세부 추진방안은 조정위 실무위원회 및 양 당사자 의견 등을 고려하여 추후 확정될 예정(조정방향 등 변동 가능)

[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 개요]

- (추진배경) 최근 공공-민간간 갈등·분쟁 등에 따라 기업의 건설투자 프로젝트 지연 사례 발생되고 있으나, 당사자간 자체적 분쟁해결에 한계*

* 지자체·공공기관 등은 임의적 사업계획 변경시 감사·배임 등 징계 우려

⇒ 공정성을 가진 제3자(조정위, '23.9 출범)의 조정·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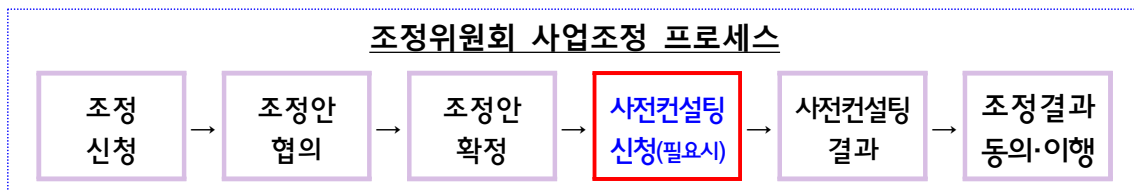
- (운영방안) 사업계획·기간 변경, 용도변경, 공사비 조정 등 사업협약상 분쟁 해결을 위해 조정위원회 구성(15인 내외), 본격 가동

정부 위원	당연직	국토부	· 1차관(주재) / 주택토지실장
		관련부처	· 기재부, 행안부, 금융위 등
	발주 공공기관		·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/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/ 인천시 도시계획국장 등
민간 위원	전문가		· 변호사 / 감정평가사 / 회계사 / 신탁사 고문 등
	협회		· 대한건설협회 등
	연구		· 한국부동산원, KDI / 한국금융연구원 / 국토연 등
	학계		· 교수 등

- (참여 인센티브) ①감사부담 해소, ②합리적 조정안 마련을 통한 참여 유도

① 필요시 감사원 사전컨설팅 연계 등 감사·배임 우려 해소 방안* 마련

* 조정위 의결 이후 필요시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, 컨설팅 결과에 따라 조정결과를 선택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허용



- ② 전문기관(부동산원+국토연)과 변호사·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를 활용하여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정대안을 마련하여 기관간 협의 적극 지원

[조정위원회 1차 조정 대상 프로젝트(15건)]

※ 조정위 1차 실무위원회 개최(11.2일) → 조정위 2차 실무위원회 논의(11월 중순):
조정 대상 안건의 조정안 마련·논의 → 본위원회 상정(11월말): 조정안 심의·의결

1] (고양 K-컬처밸리 조성) 사업계획·기간 변경 조정 협의 지원 조정 중재

- ▶ (사업내용) K-POP 클러스터(아레나) 등 체험·문화시설 구축
 - * 아레나 등 음악·예능클러스터(T2부지), 드라마·영화 클러스터(T1 부지)
- ▶ (투자기간) 아레나('16.5월 ~ '26년), 아레나 外('16.5월~'28년 이후 완공)
- ▶ (투자 규모) 1.3조원 ▶ (사업주체) C社 ▶ (사업장소) 경기 고양시

- (현황) C社는 공연장(아레나) 등을 포함한 체험형 문화시설인 K-컬처밸리 사업을 추진 중
 - 여러 차례 사업계획 변경 과정에서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
 - 또한, 최근 전력공급 상황 등 여건 변화* 및 사업기간 既도래 (~'20.12월)에 따른 외부 자금조달 애로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 호소
 - * T2(아레나) 부지 外 사업 대상 부지(T1부지 등)는 '28년 이후 전력공급 가능, 인근 하천(한류천) 수질개선 사업도 당초 계획보다 지연
 - 한편, 해당 지자체는 사업시행자 귀책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축소 등 사업계획 변경시 특혜 시비·감사 등 우려를 제기
- (조정방향(안)) 최근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사업계획, 사업 기간 변경 등 합리적인 조정 방안 마련 및 협의 지원
 - 조정방안에 대해 양 당사자 합의시 C社는 아레나(T2 부지 內)를 '26년 완공 목표로 조속히 공사 재개하는 방안도 병행 협의
- (기대효과) '23.3월 이후 중단된 사업의 정상화 등을 통해 약 1.3조원 규모 투자 효과
 - 국내 최초 K-pop 전용 공연장(아레나) 건립을 통해 한류 콘텐츠 글로벌 확산 및 국제적 관광·문화·상업 시너지 창출 기대

2 (고양 관광문화단지 内 관광숙박시설 건설) 사업계획 변경 협의 지원 조정
중재

- ▶ (사업내용) 고양관광문화단지 내 복합 관광숙박시설* 개발(H社 관광숙박시설)
* 관광호텔·레지던스·상업시설, 지하 6층~지상 41층, 3개동 규모(연면적 약 116,000㎡)
- ▶ (투자기간) '13.1~'27.12 ▶ (투자규모) 약 3,985억원 ▶ (사업장소) 경기 고양시(K-컬처밸리)

- ▶ (사업내용) 고양관광문화단지 내 관광숙박시설* 신축(S社 관광숙박시설)
* 관광숙박·생활숙박시설, 지하 3층~지상 26층, 5개동 규모(연면적 약 154,000㎡)
- ▶ (투자기간) '13.4~'24.6 ▶ (투자규모) 약 7,550억원 ▶ (사업장소) 경기 고양시(K-컬처밸리)

- (현황) H社와 S社는 고양 관광문화단지 내 K-컬처밸리 조성 사업(C社, '16~'24년)과 연계한 관광숙박시설 건설사업 추진 중
 - 그러나, 두 사업 모두 K-컬처밸리 조성사업이 지연(당초 '20년말 완공 목표) 됨에 따라 해당 사업자들은 관광숙박시설 건설을 당초 계획보다 연기하여, 착공지연 위약금 발생 중
 - 또한, H社는 건설 원자재가 인상 등으로 당초 사업계획의 변경을 요구*하고 있으나, 발주처와 이견 지속
 - * H社 요구: ①호텔 의무개발비율 조정, ②허용용도 제한 완화 ③용적률 및 고도제한 완화 등 → 지구단위계획 변경(승인권자: 고양시) 등 필요
 - 한편, S社는 당초 사업공모* 시점과 다르게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제한(오피스텔 불허)하여, 정상적 사업추진이 곤란하다는 의견
 - * 최초 지구단위계획상 호텔개발비율 70% 외 나머지 부지는 자율 개발 가능
 - 이에 대해 해당 지자체는 착공지연위약금은 판결에 의해 종결·확정되어 감면·면제 등 조정은 곤란하며,
 - 동 사업들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이므로 현 시점에서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의견
- (조정방향(안)) 소송결과 등을 감안해 착공지연위약금의 합리적 부담(안) 마련 및 일부 사업계획 변경 등 협의 지원
 - 다만, 사업계획 변경시 공공기여 확대 방안 등 검토 병행
- (기대효과) 관광·숙박 인프라 조성을 통해 약 1.2조원 투자 효과
 - C社가 추진하고 있는 K-컬처밸리 사업과 연계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지역의 한류 관광산업 시너지 효과 기대

4 (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) 사업비 조정 협의체 구성·협의 지원

조정
중재

- ▶ (사업내용)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(공공분양주택) ※ 발주처가 LH인 11개 사업 통합
- ▶ (투자 규모) 30,921억원 (11개 사업 합산)

○ (현황) 공공부문(LH 등)이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사업자가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 다수 추진 중

- 최근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사업 지연·부실화 사례 등 발생 방지를 위해 발주처-사업자 간 사업비 재협의 제도 마련*(23.3월)

* 「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」 제19조(사업비 재협의) 신설

: 협약 체결 이후 급격한 물가변동 등 사정변경시 민간참여자는 공공시행자에게 사업비 증액 요청 가능 → 양자간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비 증액여부 결정

- 그러나, 발주처는 감사 부담 등으로 사업비 재협의 절차 참여를 주저*하여, 다수의 공공주택 건설 사업 지연·부실화 우려

* 제도 신설 이후 공공-민간 간 사업비 재협의 절차가 진행된 사례 전무

○ (조정방향(안)) 해당 사업장의 특성*을 고려하여,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조정안을 제시하고, LH와 협의체 구성·사업비 조정 협의 지원

* 사업장별로 계약시기, 수익률 등 여건이 상이하여 일률적 조정이 곤란한 점 고려

- 당사자간 협의 지연시 중재기구(대한상사중재원 등)를 통한 사업비 조정 협의 권고

○ (기대효과) 3.1조원 규모 공공주택 건설투자 신속 진행

- 사업비 조정 모범사례 창출 및 他 애로사업장 확산*을 통해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적기 추진 지원

*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에 24건의 유사 건의 신청 접수(총 7.7조원 규모)

[**조정위원회 2차 조정 대상 프로젝트(19건) 중 일부사업**]

※ 조정위 2차 실무위원회 개최(11월 중순) → 조정위 3차 실무위원회 논의(12월초):
조정 대상 안건의 조정안 마련·논의 → 본위원회 상정('24.1월): 조정안 심의·의결

5 (덕산 일반 산업단지 조성) **그린벨트 복구사업 부담 경감 방안 협의 지원** 조정
주제

- ▶ (사업내용) 방위산업 중심의 일반산업단지 조성(250,779㎡, 약 75,860평)
- ▶ (투자기간) '20.9 ~ '25.12월 ▶ (투자 규모) 1,467억원
- ▶ (사업주체) 창원시(34%), D社 등 민간출자(66%)

- (현황) 덕산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방위산업 유치* 추진 중
 - * 인근 육군종합정비창, 국방과학연구소, 기동시험장, 방위산업진흥센터 등과 연계하여 시너지 창출 기대
 - 산단 조성 과정에서 **그린벨트 일부를 활용함에 따라 복구사업***(공원조성, GB해제 대상면적의 10.1%)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나,
 - * 개발계획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시 사업자는 ①**복구사업** 추진 또는 ②**보전부담금 부담** 의무 부과
 - 최근 공사비·보상비 상승 등으로 **복구사업비가 크게 상승**하여 산단 조성사업 추진에 애로 발생
 - 복구사업비 상승(산단조성 원가↑)으로 해당 산단 용지 분양 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, **입주 희망기업 철회·포기 발생 우려***
 - * 입주 희망기업 30개사(MOU 체결) 중 24개사가 입주 포기 의사 제출
 - 이에 대해 해당 **지자체는 관할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** 등 절차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
- (조정방향안) 원활한 산단 조성 추진 및 방위산업 기업 유치를 위해 **복구사업 부담 완화**를 위한 다각적 지원 방안 마련·협의 지원
- (기대효과) 산단 적기 조성을 통한 투자(약 1,467억원) 집행 및 산단 분양 단가 인상을 최소화하여 방산기업 등의 입주 기대
 - 인근의 방위산업 관련 시험장·연구센터 등과 산단 입주기업과의 연계·협업을 통해 시너지 창출

6 (수색 역세권 DMC 개발) 공공기여 부담 산정 협의안 마련·협의 조정중
중재

- ▶ (사업내용) 수색 DMC역 상부에 상업시설을 포함한 복합역사 개발
 - * 판매·문화·공공시설, 지하 4층~지상 10층
- ▶ (투자기간) '17.9 ~ '27.12월 ▶ (투자 규모) 1,395억원
- ▶ (사업주체) 한국철도공사(5%), L社(95%)

- (현황) L社는 수색 역세권 디지털미디어시티(DMC) 개발사업 추진 중
 - 그러나, 최근 해당 부지 지가 상승 및 공사비 상승 등에 따라 **기업의 공공기여 부담*** 등 가중
 - * L社는 서울시(지가의 56%), 철도공단(공사비의 5%)에 공공기여 의무 부담
 - 다만, 해당 지자체는 **최근 수색 차량기지 이전 가능성** 등이 제기되며 **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 변경 등 검토***에 따라
 - * 차량기지 이전시 지상 및 지하공간 추가 활용 가능
 -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차량기지 이전 여부 등에 대해 **조속한 결정이 필요**하다는 의견(철도건설기본계획 확정)
- (조정방향(안)) 사업의 신속한 개시를 위해 사업시행자의 공공기여에 대한 부담 협의안 마련을 지원
 - 상황변화 등을 고려한 사업계획을 신속 수립, 협의 추진
- (기대효과) '27년까지 1,395억원 투자 효과
 - 장기간 보류된 서울 서북권 주요 사업 신속 재개 기대

수색 역세권 디지털미디어시티

위치도

조감도



IV. 과제별 향후 추진 계획

1 투자 관련 규제 및 여건 개선

추진 과제	소관부처	추진일정
1. 울산 대규모 석유화학시설 건설		
1-1. ^(1안) 산단 내 대체부지 탐색·협의	산업부	'23.12월
1-2. ^(2안) 산업집적법 개정	산업부	'24.6월
2. 충청 이차전지 생산공장 구축		
2-1.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	소방청	'23.12월
3. 연구개발특구 개발		
3-1.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	과기정통부	'24.上
4. 전남 해상풍력 발전		
4-1. ^(단지조성)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	행안부	'24.上
4-2. ^(송변전설비) 습지보호지역 철탑 설치 관련 연구용역 등 추진	해수부·지자체	'24년
5. 영천 경마공원 조성		
5-1. 「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」 개정	행안부	'24.上
6. 부산 에코델타시티 내 생산시설 건립		
6-1. 열 생산시설 신설 허가	산업부	'23.12월

2

행정절차 Fast-Track 추진

추진 과제	소관부처	추진일정
1. 하남 K-POP 공연장(The Sphere) 설립		
1-1. The Sphere 조성사업 기본계획 준공	하남시	'24.1월
1-2.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	행안부	'24.5월
1-3. 개발제한구역(GB) 해제	국토부	'25.1월
1-4. 도시개발구역 지정	경기도	'25.4월
1-5. 실시계획 승인	경기도	'25.10월
2.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		
2-1. 산업단지계획 변경 신청	LH	'23.11월
2-2. 산업단지계획 변경 협의 및 심의	국토·환경산업부	'23.11월~
2-3.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	산업부	'24.上
3. 부산 세계적 미술관 분관 건립		
3-1. 「지방재정투자심사」 면제	행안부	'24.1Q
4. 대구·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		
4-1. 대구·경북통합신공항 예타 조사 면제	기재부	'23.10월
4-2. 신공항 기본계획 수립	국토부	'23.11월~
4-3. 국도·국지도 건설계획 개정 검토* * 국지도 68호선 확장 관련 타당성 검토	국토부	'25년
5. 경인 해상풍력 발전사업		
5-1. 사업자의 여객선사 협의·안전조치 등 지원	해수부	'23.11월~

3

사업분쟁의 조정·중재

추진 과제	소관부처	추진일정
1. 1차 조정대상 과제 15건		
▶ √고양 K-컬처밸리 조성, √고양 관광숙박시설 건설(H社, S社 등 2건), √인천 검단신도시 역세권 개발, √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(발주처가 LH인 11건 통합)		
1-1. 조정위원회 2차 실무위원회 상정	국토부	'23.11월
1-2. 조정위원회 본위원회 상정·의결	국토부	'23.11월
2. 2차 조정대상 과제 19건		
▶ √덕산 일반 산업단지 조성, √수색 역세권 DMC 개발, √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		
2-1. 조정위원회 3차 실무위원회 상정	국토부	'23.12월
2-2. 조정위원회 본위원회 상정·의결	국토부	'24.1월